

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세부추진방안

2018. 12.

금 융 위 원 회
금 융 감 독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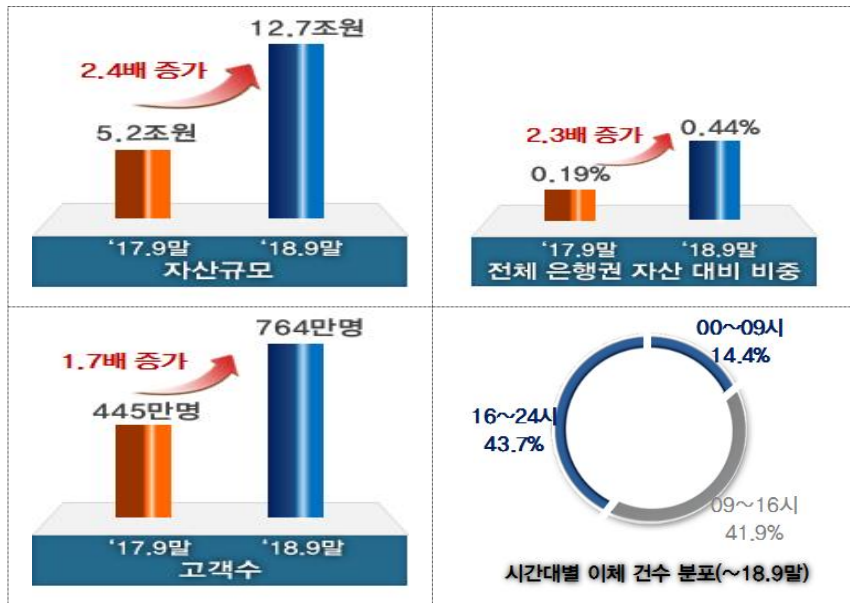
목 차

I. 그간의 경과	1
II. 인터넷전문은행 성과 및 보완과제	2
(1) 출범 후 성과	2
(2) 향후 보완과제	3
III.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필요성	4
IV.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	5
(1) 인가절차	5
(2) 인가 개수	6
(3) 인가 업무범위	7
V. 인가심사기준	7
(1) 은행법상 인가 심사기준	7
(2) 추가 심사기준	9
VI. 향후 추진일정	10
<참고1>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내용	11
<참고2>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신청시 기타 고려사항	14

I. 그간의 경과

- '15.6월 금융개혁 주요과제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
 - 1단계로 당시 은행법에 따른 적격 사업자에게 인가하고, 2단계로 은행법 개정* 후 추가인가를 진행할 계획임을 발표
 - *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보유한도 상향 등
-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평가기준을 공개('15.9.7일)하고 신청 접수('15.9.30일~10.1일)
- 금융위에서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케이뱅크 및 카카오뱅크에 대해 예비인가 의결('15.11.29일)
- 금융위에서 금감원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케이뱅크('16.12.14일) 및 카카오뱅크('17.4.5일)에 대해 본인가 의결
- 케이뱅크('17.4.3일) 및 카카오뱅크('17.7.27일) 출범

<인터넷전문은행 주요 현황>



II. 인터넷전문은행 성과 및 보완과제

(1) 출범 후 성과

- (이용 편의성 제고)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 혁신의 구심점으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*하고 금융상품의 지형을 확대**
 - * 24시간 공인인증서 없는 거래, SNS 간편송금, 상담챗봇 등
 - ** 간편한 개설이 가능한 공동계좌 출시, 상품의 만기·적립방식 다양화 등
- (금융부담 경감)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이후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간 금리 경쟁* 등이 활발해지는 모습
 - * (대출)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 은행권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가 하락 ('17.7월 4.56% → '17.8월 4.47% → '17.9월 4.39%)하는 모습이 나타남
 - * (예적금) 인터넷전문은행의 정기예금(1년만기) 금리는 4대 시중은행보다 30~90bp 높은 수준(은행연합회 '18.11월 공시 기준)
- 은행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*에도 기여
 - * 은행권 최초로 모바일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허용
 - * '18.1~8월중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실적이 17,741건으로 은행권 전체(82,162건)의 22%에 이룸
- 중도상환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부담 경감* 노력도 경주
 - * 카카오뱅크는 중도상환수수료, ATM수수료를 면제 중(출범 이후 고객중 10.5만명(대출고객의 46%)이 중도상환, 면제 추정액은 약 70.4억원)
 - * 외화송금시 별도 전신료 없이 건당 4,000~10,000원의 수수료 부과중 → 일부 은행도 유사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모습
- 중금리대출 공급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여 중·저신용자(4등급 이하자)의 은행 접근성 개선*
 - * '19.1월부터 사잇돌대출을 취급하고, 자체 중금리 신용평가모형도 개선·고도화해나갈 예정

□ (산업 발전) ICT기업의 추가 투자로 핀테크기업 및 연관산업 (HW, SW, R&D)의 발전 및 일자리 창출 가능

- 핀테크기업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핀테크 발전·해외진출 촉진
 - * 강소 핀테크기업인뱅크웨어글로벌은 케이뱅크와의 협업 이후 2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70% 성장·직원이 2배 이상 증가, 필리핀·일본 등 진출

□ (기존 은행의 행태 변화) IT 플랫폼 기반의 인터넷전문은행에 자극받아 기존 은행의 쇄신과 혁신이 촉진되는 모습

- 빅데이터,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선 노력 확산
- 모바일 단일앱 개발, 핀테크 전문인력 영입 등 IT 투자 활성화

[2] 향후 보완과제

□ 인터넷전문은행은 아직 출범 초기이며 그간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본력, 사업경험 확충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도 있음

- ❶ (혁신성) 기존 은행과의 차별화를 위해 인공지능, 빅데이터, 클라우드 등 핀테크 서비스의 지속적인 고도화 노력 필요

☞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혁신 ICT기업의 경영 주도 필요

- ❷ (포용성) 중금리대출·중소기업 대출* 등의 적극 취급을 위해 관련분야 데이터·경험 축적 및 경영진의 지속적 관심이 필수적

* 이미 취급중인 일반 가계대출과 취급방식 리스크가 상이

☞ 신용평가·리스크관리·전산시스템 개발 등이 이루어질 필요

- ❸ (안정성) 예금자 보호 강화,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을 위해 적정 수익을 지속 창출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·시행이 필수적

☞ 장기간의 시야를 가진 주주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

➡ 기술·창의력을 갖추고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본 투자·경영 주도가 가능한 혁신 ICT기업의 참여가 필요

III.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필요성

□ 혁신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관련 법령 마련

- '18.8.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성과와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

- 은산분리 원칙의 대전제 하에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를 살려 나가고 리스크 수준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함

- 혁신 ICT 기업 등이 34%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*이 '19.1.17일 시행 예정

* 「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('18.9.20일 국회 통과, '18.10.16일 공포)

□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은행업 경쟁도평가('18.12.3일) 결과 및 정책제언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

- 정량분석(시장집중도), 보조분석(산업구조·재무지표 등), 정성평가(설문조사) 등을 감안할 때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

* (정량분석)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고 있어 일의적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, 시장집중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

* (보조분석)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과 큰 격차를 유지하며 고착되면서 비용효율성이 악화되고 있어 경쟁을 통한 개선 필요성 존재

* (정성평가)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은행업의 경쟁에 대해 보통 이하로 평가

- 이에 따라, 경쟁도 제고를 위해 신규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

- 신규진입 형태로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·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방안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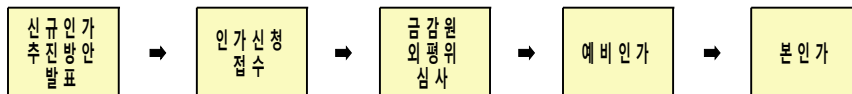
- 단기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, 중장기적으로 은행업 인가단위 세분화를 고려할 것을 권고

IV.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

(1) 인가절차

-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으로 다수 인가신청자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개별신청·순차심사보다 **일괄신청 후 일괄심사** 진행
- 은행법령·인터넷전문은행법령 등을 감안하여, 인가신청 접수 후 **외부평가위원회** 평가, 예비인가, 본인가 등의 절차 진행
 - 인가 심사의 **공정성·투명성 확보**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인 **외부평가위원회**를 구성·운영* 예정
 - * 금감원장은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(은행업감독규정 제7조)
 - 금융위는 금감원의 심사결과 및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**예비인가*·본인가** 결정**
 - * 신청 접수 후 2개월 이내 결정
 - **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결정

<신규인가 절차>



- 인가 신청희망자가 인가심사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**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예정**
 - 기존 인가매뉴얼에 대한 **온라인 Q&A**, 인가설명회를 통해 인가 신청희망자 등의 의견을 수렴
 - 새로운 인가심사기준과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인가매뉴얼을 보완하고 **사전 확정·게시**

[2] 인가 개수

-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,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**2개사 이하***를 신규 인가할 예정

*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 최종 인가개수가 2개 미만일 수 있음

- ①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업 영역 중 **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대출 시장*** 중심의 업무범위 **특성****이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진입 필요

* 가계대출 시장의 HHI 지수(각 은행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의 합)가 1,406으로 총대출 시장(1,244)보다 높아 경쟁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(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전인 '16년말 기준)

** 대출 중 개인(가계·자영업자·소상공인 등)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 가능

- 가계대출 시장의 **HHI지수를 1,200 이하로 낮추기*** 위해서는 **약 2개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진입이 필요**한 것으로 분석됨

*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시 집중되지 않은 시장으로 보는 기준

- ② **일본·영국** 등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이 활발한 주요국과의 **경제 규모, 인터넷전문은행 개수** 등 비교시 **2개사 이하**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진입이 **적정**한 것으로 분석됨

- **(일본)** '00년 이후 **9개의 디지털 중심 은행**이 설립되어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

- **(영국)** **5개의 디지털 중심 은행**이 영업중이고 '18.12월 P2P 업체인 Zopa가 은행 인가를 획득한 것으로 파악

- ③ 다수의 인가 신청자가 있는 경우 **유효경쟁**을 통해 은행산업의 경쟁 및 혁신을 촉진할 **더 좋은 플레이어의 신규 진입**을 유도하기 위해 **2개사 (이하)**에 대해 신규인가

[3] 인가 업무범위

□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*는 모두 허용할 예정

*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 금지되나,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허용(인터넷전문은행법 제6조)

○ 現 은행법 및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은행업은 인가단위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를 분리해서 제한할 실익이 없음

V. 인가심사기준

[1] 은행법상 인가 심사기준

□ 인터넷전문은행 (예비)인가시 심사항목은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*을 기본적으로 적용

* 「은행법」 제8조, 「은행법 시행령」 제1조의7, 「은행업감독규정」 제5조·별표 2-2

①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

- 자본금이 **250억원** 이상인지 여부
- 소요자금 조달이 현실성이 있고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

②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

- 대주주가 은행법령상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
-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·주요주주 등이 아니며, 은행법령상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

③ 사업계획

- 추정재무제표·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
- 은행법령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
- 위험관리와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와 업무방법이 마련되어 있을 것

④ 발기인 및 임원(본인가시 심사)

-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

⑤ 인력, 영업시설,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시설

- (인력)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을 것 등
- (영업시설) 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는 영업시설을 갖추고,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등
- (전산체계)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,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될 것 등
- (그 밖의 물적시설)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을 것

⑥ 외국 금융회사 또는 외국 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의 신청 관련

- 본국 감독당국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 적법한 동의를 받을 것
- 재무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국제적인 신인도가 인정될 것
- 은행 관리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 등

[2] 추가 심사기준

- ☐ 인터넷전문은행법령 및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중점 평가

*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, 별표

①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

- 설립 당시 예측한 수준을 초과하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자본조달방안을 마련할 것

②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

-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,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 비중을 감안한 인터넷전문은행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
- 주주 구성이 인터넷전문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데 유리할 것
-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장기간의 시야를 가지고 인터넷전문은행업에 참여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할 것 등

③ 사업계획

- (혁신성) 차별화된 금융기법,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고, 혁신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할 것
- (포용성) 서민금융 지원, 중금리대출 공급 등 더 낮은 비용이나 더 좋은 조건으로 포용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 이익 향상에 기여할 것
- (안정성) 안정적인 경영에 필요한 적정 수익의 지속 창출이 가능할 것

- (경쟁 촉진) 기존 은행산업, 금융산업의 경쟁도 제고가 가능할 것
- (금융 발전)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,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
- (해외 진출) 해외진출을 고려한 사업계획 및 실천능력을 보유했을 것 등

※ 예비인가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구성·결정하여 '19.1월중 발표할 예정

VI. 향후 추진일정

- ☐ 인가매뉴얼 관련 온라인 Q&A 페이지 개설 : '18.12.26.~

* 금감원 홈페이지에 개설하며 접수된 문의에 대해 검토하여 인가설명회에서 설명하거나 인가매뉴얼 확정시 답변할 예정

- ☐ 인가설명회 개최 및 평가항목·배점 발표 : '19.1월중

- ☐ 예비인가 신청 접수 : '19.3월중

- ☐ 예비인가 심사 및 결과 발표 : '19.5월중(잠정)

* 구체적인 예비인가 심사기간은 실제 예비인가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인가신청 접수 후 별도 발표 예정

- ☐ 본인가 심사 및 결과 발표 : 본인가 신청후 1개월 이내

참고1

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내용

1. 소유구조 :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

- 비금융주력자*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발행주식 총수의 34% 이내에서 보유 가능

* 비금융회사 자본총액 \geq 전체자본의 25% 또는
비금융회사 자산합계 \geq 2조원 등

- 다만,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, 정보통신업(ICT)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

○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

$$\frac{\text{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}}{\text{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}} \geq 50\%$$

- ICT 기업 :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("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", "방송업", "공영우편업"은 제외)을 영위하는 회사

- 추가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음

-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등의 최대주주 등이 아니고, 금융관련 법령·공정거래법·조세범처벌법·특경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
-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규정 준수
- 기타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 충족

※ (일반은행) 비금융주력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4% 이내에서 보유 가능
(의결권 미행사를 조건으로 승인을 받아 4%를 초과하여 10% 이내에서 보유 가능)

2. 최저자본금 요건 : 지방은행 수준

- 영업점포가 없다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자본금요건 완화
 - 지방은행과 동일한 250억원으로 최저자본금 하향 조정

※ (시중은행) 유지해야 하는 최저자본금은 1천억원

3. 업무범위 : 대기업 대출 금지

- 고유업무, 겸영·부수업무 영위가 폭넓게 가능*하나,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금지**

* 다양한 업무개발 가능성 확보로 금융서비스 혁신 및 신시장 창출 유도

**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한 자금고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

- 다만,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·자영업자·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예외적 허용

※ (일반은행) 제한없이 고유업무, 겸영(인가 필요)·부수업무 영위 가능

4. 업무방법 : 비대면영업 원칙, 예외적으로 대면영업 허용

- 원칙적으로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*의 방법으로 영위

*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

- 이용자 보호,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* 대면영업 가능

* ① 장애인,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

②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하였으나, 법령·기술상 제약으로 거래를 최종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

※ (일반은행) 제한없이 대면영업 가능

5. 건전성규제 : 일반은행과 동일, 초기 부담 완화

- 주요 건전성 규제(자산건전성, 유동성(LCR)*, 예대율)를 원칙적으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

*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은 LCR 규제를 특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
(’16년 70% → ’19년 100%)

- 다만, 자본적정성 관련 ’19년말까지는 바젤 I 을 적용하고, ’20년부터 바젤Ⅲ를 단계적으로 적용(’23년부터 전면적용)

※ (일반은행) 자본적정성 관련 바젤Ⅲ 적용 중

6. 영업규제 : 일반은행보다 강화

- 대주주와 관련된 규제를 일반은행보다 강화하여 대주주의 사금고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

-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,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*

*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경우 등 예외

- 인터넷전문은행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인 대주주와의 모든 거래 금지

-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20%,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5%로 강화

※ (일반은행)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25% 이내,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은 자기자본의 1% 이내에서 허용
-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에 매매·교환·신용공여 금지
- 동일차주/동일인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25%/20%

참고2

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신청시 기타 고려사항

1. 지급결제망 참여

- 한국은행·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

2. 전산설비 구축

- IT 전문업체 등의 전산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위탁 허용*
* ’15.7월 금감원 보고(사전 또는 사후)를 거쳐 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(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)
- 다만, 인가심사시 전산설비의 안정성·성능, 정보처리업무·전산설비별 위탁 필요성 등을 고려할 예정

3. 계좌 개설시 비대면 실명확인

- 비대면 실명확인 적용방안*에 따라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쳐 활용 가능

* ’15.12월 금융실명법·전자금융거래법상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(유권해석)

- (이중확인: 필수) ①신분증 사본 제출, ②영상통화,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, ④기존계좌 활용,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(생체인증 등) 중 2가지 의무 적용
- (다중확인: 권고) 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(휴대폰인증 등),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~⑦ 중 추가확인 권고

4. 대포통장 사전예방

-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시 고객 확인절차의 신뢰성 확보 필요(’18.12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)

- 신분증 진위 확인절차 강화*, 초고위험 고객군 별도 관리 등
* 계좌가 개설된 후 직원이 직접 신분증 위·변조를 조사하는 절차 등 마련

5. 신용카드업 운영

- 인가요건*을 갖추어 인가를 받아 신용카드업 경영 가능

* 영업점포가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점포(30개 이상), 임·직원(300명 이상) 요건은 적용 제외(’16.1월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개정)